

# 韓國의 不實企業에 관한 一考察

——外資不實企業을 中心으로——

宋 鍾 克\*

## I. 韓國企業의 生成과 發展

1. 해방전후의 전사시대
2. 귀속재산의 40년대
3. 외국인조의 50년대
4. 외국차관의 60년대
5. 경기전승의 70년대

## II. 韓國企業의 外資導入

1. 量的 增大
2. 質的 選別

## III. 韓國의 外資不實企業

1. 不實化要因
2. 政策方向
3. 整理方案

## IV. 韓國企業의 不實化止揚

1. 景氣浮揚
2. 環境造成
3. 經營合理化

## I. 韓國企業의 生成과 發展

오늘날 한국의 기업은 하나의 轉換點에 와 있다. 이것은 국내기업이 그동안 팔목할 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이지만 8·3조치 이후 상승되고 있는 好況속에서도 안정과 성장을 위협하는 몇 가지의 저해요인이 노정되고 있어서 그중 不實企業 내지 反社會的 企業人에 대한 정부의 응

\* 法經大學 經營學科 教授

정조치가 취하여지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서 産業再編成과 기업의 合理化問題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競爭原理에 입각하여 경영이 이루어지고 企業의 盛衰와 浮沈, 그리고 勝者와 敗者가 판가름 되어지는 국제적인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그동안 한국기업이 걸어온 발전과정을 그 단계적 특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4단계와 70년대의 제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한 연후에 부실기업의 발생요인과 그 처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第 1 段階 解放前後的 前史時代

日帝時代に 土着資本으로 工業部門에 발을 붙인 것은 京紡系 정도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 밖에는 和信産業을 비롯하여 일부 商業資本이 존재하였을 뿐이었다.

日帝는 우리 民族資本의 형성을 극도로 억제하여 해방당시의 한국인의 자본은 국내 총회사 자본의 6%에 불과한 빈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近代의 經營 또는 企業生成過程을 논할 때 이것을 前史時代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 第 2 段階 歸屬財産이 主軸을 이룬 40年代

해방후 물밀듯이 들어온 完製品이나 原資材의 무상원조와 정치적 혼란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였으며 일제가 남기고 간 생산시설중 일부는 국영기업으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한편 2,500여개의 귀속재산의 많은 부분은 특정인에게 불하되었다.

더구나 귀속재산의 불하가격이 時價의 몇분의 일도 안되는 헐값이었고 그나마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15년간의 연불조건으로 넘겨졌기 때문에 특혜라는 악명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에는 극심한 '인플레이' 하에 있었음으로 기업의 인수자에게는 그만큼 유리하였다.

귀속재산으로 민간에게 불하된 기업중에는 三陟시멘트, 北三化學, 達城製系, 東洋紡績, 朝鮮紡績 대구, 부산공장 및 日新, 全南紡績 등이 있다.

이와 같이 관권과 결탁하여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것으로 일약 기업가가 되고 그 위에 운영자금, 시설확장자금 명목으로 低利의 은행차입금을 얻어다 원조자재나 원조물자를 구입, 橫流시킴으로써 거액의 치부를 할 수 있었던 이 시기의 기업환경으로서는 경영의 합리화나 생산력증강 그리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의 발휘란 무리한 요구였고, 자연히 기업가는 권력주변에서 맴돌게 되고 경영의적요인이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는 경영부제시대를 이룬 것이다.

### 第 3 段階 外國 (無償)援助로 再起한 50年代

귀속재산의 불하와 누진적 '인플레이'의 덕으로 힘들이지 않고 치부한 많은 기업인도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시설은 거의 회진되어서 제전을 이룩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동란전에 귀속불하로 이미 기업가로서 기반을 굳힌 일부 특정인에게는

다시금 기존시설 중심의 재해복구시설자체의 우선배정이라는 특혜조치가 주어져 재기의 ‘찬스’를 얻었다.

불의의 전화로 잿더미만 남은 기업인에게 이제 재기의 방법이란 오직 外國援助 뿐이었다. 복수환율하에서 고철과 다름없는 명색뿐인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저리의 공정환율로 원조자금을 배정받고 그것을 두배의 가까운 시중의 암시장에서 팔거나, 특정품목을 수입하여 팔게 되면 富는 늘기 마련이었다. ‘쿼터’배정, 낙하산식 용자, 연계자금 등의 대명사가 유행하였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이상비대증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몫을 하였다.

ICA 나 AID 원조자금은 자기자금 15%만 적립하면 필요한 공장을 건립할 수 있었고 물가의 앙등은 상승임로에 있었으며 51년에 2.5대1의 공정환율이 60년에 50대 1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판국에 자기자금으로 착실하게 생산하겠다는 企業人이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3白 ‘불’이나 3粉소동은 모두가 이러한 환경하에서 빚어진 부산물이며 오늘의 재벌은 대개가 이러한 시기에 발판을 구축하였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원조자금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비확장을 이룩한 기업으로서는 大韓洋灰, 東洋시멘트, 仁川판유리, 東立産業 등이 대표적인 존재들이며 이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직, 간접적으로 40여억불에 달하는 원조불을 비롯하여 정부불의 공매 또는 배정에 참여 함으로써 공급부족시대에 편승, 독점적으로 도입한 수입물자와 그들의 독점적인 생산품을 판매하여 독점이윤을 취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서는 많은 기업이 원조자금, ‘인플레이·갭’ 이중환율, 特惠融資 등의 방법에 의하여 동란으로 폐허화된 공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현대적 시설을 도입하여 독과점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재벌의 기틀을 닦았으며 대부분이 무에서 새롭게 출발한 再建期라고도 할 수 있다.

#### 第 4 段階 外國借款이 主導한 60年代

앞서 말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기업의 生成過程은 대체로 일부 토착자본에 의한 공업부문과 상업자본의 진출 이외에는 대부분이 귀속재산을 헐가로 인수하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이것이 6·25동란으로 일단 잿더미로 화하였으나 기시설 소유자란 명목으로 피해복구자금, 특혜 용자 등 他力으로 재기한데에 또한 ‘인플레이’의 이득이라는 천혜조건으로 이상 비대화하였고 복수환율제하에서 음폐보조로 재벌급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市場을 지배함으로써 독과점에 의한 독점이윤을 축적하여서 마침내 4·19이후 不正蓄財處理對象業體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히기에 이르렀다.

과도정권하의 검찰이 한때 대표적인 10대재벌의 전재산을 몰수하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

다는 설도 있었으나 그후 통고된 還收金額은 3차에 걸치어 대폭 삭감되었고 일부는 공장을 건설하여 주식으로 납부하는 등 상당히 완화되었다.

특히 5·16이후에는 경제제1주의를 표방한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존업체들이 대거 경제개발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活路를 얻었고 외국차관, 合作 등으로 신 산업과 새공장이 늘어만 갔다.

한편 이제까지 무려 40여억불의 外債가 들어왔고 이와 같은 量的 擴大政策에 힘입어 너도나도 他力으로 기업을 급조하였으며 심지어 '유니온·세로판'과 같은 경우는 자기자본 5%에 타인자본 95%라는 재무구조의 심한 불균형을 노정시키어서 不實化의 폐단을 자초하기도 하였다.

하여간 이 시기야말로 한국경제가 평균 8.5%라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韓國肥料, 石油公社, 湖南精油, 雙龍시멘트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이 탄생하게 되어 하나의 '에포크'를 마련하였다.

#### 第5段階 輸出景氣에 편승한 70年代

중전 고질적인 '인플레이'의 악순환과 企業財務構造의 취약, 不況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는 국내경기 등 60년대의 高度成長의 그늘에 숨은 누적된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명령」이라는 이 충격적인 조치가 취하여진 지난 1년동안 한국의 기업은 幅에 있어서나 質에 있어서나 엄청난 변화를 야기시키었다.

私債의 동결조치로 기업은 재무구조의 개선이 가능케 되었으며 사채시장이 株式金融으로 흡수되는 동시에 第2金融圈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으며 한편 국제적인 호황에 편승, 전례없는 수출신장에 힘입어 국내기업은 큰 활황을 맞이하였다. 1백개 기업중에서도 61개의 제조업이 전년에 비하여 변함없을 뿐더러 販賣高는 6천8백46억원으로 전년에 5천38억원에 비하여 36%가 늘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立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의 체질변경이 자본시장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전과 같은 간접조달보다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昨今の 현상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증권의 민주화와 증권저축을 구현키 위하여 企業公開의 촉진 또는 增配를 주저한 반면 減配만을 일삼던 기존기업체들의 타성을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최근 승인된 차관의 내역을 보면 주로 차관이 생산제 및 시설확충에 쓰여지고 있는 반면, 外資가 당면한 관광 '붐'에 편승하여 '호텔' 등의 합작투자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자못 주목되는 바이다. 그런데 차관 및 외자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한국의 立場이 지난날의 他律의인 여건으로부터 自律의인 태세로 바뀌어졌다는 것은 흐뭇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크게는 국제사정과 아울러 금년도 상업차관한도의 거의가 소진될 정도로 외자가 바야흐로 한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앞서 말한바 不實企業 들이 反社會的 企業人이라는 이름으로 응징을 받았으며 産業合理化의 기운이 태동하기도 하였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8·15이후 지금까지의 企業史란 한마디로 말하여 多분히 經營外的 要因이 지배하여 온 경영이전의 시대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그 일반적인 特徵을 살펴보면,

- I. 경영규모가 극히 영세하고 대규모기업이라 하더라도 거의 국제규모에 미달된다.
- II. 대부분 특혜로 이루어진 독과점 상태로서 생산집중도가 높으며
- III. 創業年度가 일관하고 가부장적 경영형태하에 아직도 苦汗制度가 일반적이다.
- IV. 경영자가 경쟁경영에 숙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社會性的인 인식이 허박한 기업인으로서
- V. 경영기술이 뒤떨어져 있어서 생산성이 극히 低位에 있다는 것, 그리고
- VI. 생산면에서의 이윤추구 보다는 유통면에 편승하는 동시에 自力보다는 他律的인 환경에겐대 특혜금융, 타인자본, 권력의존 등에 기대하려고 한다.

요컨대 이러한 후진국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종래의 한국기업으로서는 종래 국제경쟁력의 강화나 근대적인 경영기술의 도입이 소홀하여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6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의 企業環境은 크게 변화되고 있거니와 이것은 곧 貿易의 자유화를 비롯하여 金利의 현실화 등 개방체제로의 이행이 진전되고 있으며 호 불호간에 국제경쟁을 강요당하고 있기에 점차로 경영합리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sup>①</sup>

## II. 韓國企業의 外資導入

### 1. 量的 增大

우리나라는 1959년이래 지난 6월말까지 총액 41억 4천 8백 42만불(商業借款과 外國人投資는 認可, 公共借款은 협정체결 기준)의 외자를 도입하였다.

경제기획원 集計에 의하면 이중 상업차관이 52.8%인 21억 9천 2백 61만불로 제일 많고, 공공차관이 36.8%인 15억 3천 1백 80만불이며, 外國人投資가 10.4%인 5억 2천 4백 1만 4천불이다.

특히 올들어 6개월간에 상업차관이 1억6천63만불, 公共借款 3억9천2백80만불, 외국인투자 1억6천9백7만7천불 등 모두 6억6천2백50만불이나 된다.

借款先을 國別로 보면 미국이 15억 4천 82만불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본 8억 7천 7백만불, 그리고 서독, 이탈리아 등의 順으로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는 전체로는 아직 미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올들어 인가된 1억 6천

註 ① 林在瑒, 韓國企業의 歷史, 『現代經營』 韓國能率協會, 1969년 9월호, pp. 26~28.

9백 7만 7천불중 94.1%인 1억 6천 7백 75만불이 日本地域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8월 16일에 열린 외자도입심의위원회는 導入史上 최고액인 2억 5천 2백 86만불을 제2조선, '칼러' TV, 호텔 등 사업을 위하여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인도, 그리고 홍콩, 서독 등지로부터의 도입을 승인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72년말 현재 대외부채잔고가 26억 6백만불인데 금년부터 오는 81년까지 총액 1백억 3천 2백만불에 달하는 외국자본을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72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8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公共차관 및 商業차관 84억 4백만불, 외국자본의 직접 또는 합작투자 16억 2천 8백불 등으로서 이대로 한다면 앞으로 해마다 약 10억불 이상의 외자가 들어온다는 셈이 된다.

당초 80년대초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1,000불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약 40억불의 외자도입이면 족하리라던 것이 그보다 배이상의 외자를 소요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당초 계획에 커다란 착오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동기간중 借款元金 32억 8백만불, 借款利子 27억 6천 9백만불 그리고 외국인투자에 의한 果實送金 6억 5천 4백만불 등 모두 66억 3천 1백만불을 상환함으로써 81년말의 총대외부채잔고는 68억 9천 3백만불이 된다. 그러나 國際收支에 대한 상환부담율은 72년 14.4%에서 76년 11.8%, 81년 8.8%로 점차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年度別 차관원리금 상환액 및 과실송금액은 別表 (1)과 같다.

이와 같이 도입된 外資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다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외자에 대한 受容態勢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채 단기간에 방대한 외자를 도입하였던 관계로 부분적으로는 効率的으로 활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작용도 하였다.

表 1. 年度制 借款元金償還額 및 果實送金額

(單位 100萬弗)

| 年 度 | 償 還 額 | 國際收支에 대한<br>償還負擔率 (%) | 年 度 | 償 還 額 | 國際收支에 대한<br>償還負擔率 (%) |
|-----|-------|-----------------------|-----|-------|-----------------------|
| 7 2 |       | 14.4                  | 7 7 | 723   |                       |
| 7 3 | 435   |                       | 7 8 | 797   |                       |
| 7 4 | 502   |                       | 7 9 | 904   |                       |
| 7 5 | 539   |                       | 8 0 | 1,007 |                       |
| 7 6 | 618   | 11.8                  | 8 1 | 1,106 | 8.8                   |

※ 經濟企劃院 1973. 8. 18.

## 2. 質的 選別

따라서 外資導入에 당면과제는 3차경제계획부터 소요되는 외자를 차질없이 확보하는 동시에 종래 그것에 부수하여 유발되었던 바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배제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政府가 계속 추구하여온 高度成長政策과 외자도입의 무분별은 배어서 생각할 수 없거니와 產業組織論의 전지에서도 그 선별이 무원칙하였던 외자도입허가의 남발이 차관기업 부실화의 유력한 하나의 원인이었고 規模의 經濟에 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실만 보아도 자간의 소식은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은 이 점에 관한한 不實企業의 정리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여서 어떠한 해결책이 명백히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不實企業의 발생원인을 전면적이고도 立體的으로 밝혀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거니와 이것은 不實企業이란 그렇게 단순하고 평면적인 원인의 소산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여간 일반적으로 부실기업이란 우선 거의 自己資本없이 外債에 의하여 적정규모를 무시하고 설립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市場性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당국의 同一業種企業에 대한 외자도입의 과잉허가로 설립된 기업, 그리고 經濟外的인 힘, 다시말하면 정치권력과 결탁되어서 특혜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부실의자도입으로 설립된 기업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시에 또한 이러한 기업의 설립과정이 부실기업의 발생원인화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 또한 우리나라 企業經營의 近代化를 이룩할 수 있는 관건이 기업의 경영·관리능력 이요 또 효율적인 行政能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부실기업군을 발생시킨 한국의 사회기업풍토의 생리를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高率投資, 高度成長을 위하여 다구치고 있는 종합적 장기개발계획하의 경제계획적 체제와 다른 한편으로는 貿易自由, 企業自由를 원칙으로 하는 開放體制로의 강행군이 빛고 있는 모순과 혼란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실화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不實企業의 원인을 이상과 같이 파악할 때 整理를 위한 기본방향은 스스로 명백하여질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부실근원으로 생각되는 불건전한 財務構造를 개선하는 것을 비롯하여 기업의 合併統合, 追加投資 등에 의한 시설규모의 확장과 선진기술의 흡수, 외자도입에 있어서의 長期低利外資의 選別, '코스트' 인하를 위한 조세감면, 유능한 近代의 企業家의 발굴양성, 자격있는 경영자로의 대체, 그리고 끝으로 '인플레이' 과정에서 하나의 생리로 되어버린 外部資金 依存傾向과 그 밖의 그릇된 權力依存과 企業倫理를 바로 잡는 문제들이 바로 그것이다.

### Ⅲ. 韓國의 外資不實企業

#### 1. 不實化要因

한국경제는 경제자립을 목표로 하는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집행으로 공업성장에 主

導된 高度成長을 이룩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기간중(1962~1966) 한국경제는 年平均 8.3%라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이어 착수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있어서도 1970년까지 연평균 11.8%라는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量的으로는 諸指標에 있어서 계획목표를 앞당겨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한국경제는 1962~70년간에 연평균 9.9%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의 규모는 倍加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國民經濟규모의 확대와 주요 계획목표의 달성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당초 계획이 의도하였던 自主的 국민경제의 확립을 실현하지 못하였으며 도리어 국민경제의 規模成長에 따라서 처음의 의도와는 역행하는 방향으로의 전개가 심화되고 있었다.

한국경제가 量的으로 諸指標上的 계획목표를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조성된 부정적 측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 국민경제의 構造的 측면에 있어서 그간의 경제성장은 경제구조의 二重性 및 跛行性을 심화시키고 사회적인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民族資本으로서의 中小企業이 몰락하고 外國資本 및 外資關聯資本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중추를 장악하도록 방임되었다.
3. 국민경제의 對外競爭力 및 自主性이란 측면에서 보면 原資材의 높은 對外依存과 特定國에의 資本 및 貿易依存의 심화를 가져왔으며 技術的으로 낙후하였거나 경제규모에 미달하는 기업을 외자도입에 의하여 창설함으로써 거의 80%에 이르는 외자업체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었고 이것을 국민적 부담으로 남겨놓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국민의 消費構造를 왜곡시킴으로써 높은 輸入需要를 유발하였다.
5.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支拂能力을 초과하는 對外債務의 누적을 결과하였다.
6. 工業의 급격한 신장에 비례하여 공해의 擴大를 야기시켰었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에 대한 평가도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큰 차이를 示顯할 수 있다.<sup>②</sup> 지난 兩次的 경제계획의 평가에 있어서도 긍정적 측면인 量的 경제성장만을 강조하여 이를 中進國을 향한 기반의 구축과 경제자립의 길을 더욱 단축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가 반드시 경제자립이 빠른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부정적 제 측면과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낳은 경제의 논리가 그대로 방임지속되는 한 국민경제의 자립은 어려우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와 기업이 量的인 成長에 의한 규모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經濟自立으로 이끌지 못한 非理를 해명하는 하나의 문제로서 外資不實企業을 고찰대상으로 한 것이다.

註 ② 邊衡尹, 韓國經濟의 診斷과 反省, 『新東亞』, 1971년 11월호, p. 65.

이미 말한바 韓國은 연평균 목표성장율이 10%를 넘는 高度成長政策下에서 수 많은 계획사업과 비 계획사업 들이 外資와 금융기관 용자의 뒷받침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外資企業體와 巨額融資企業體의 元利金償還期限이 도래됨에 따라서 代拂現象과 延滯現象이 누증됨으로써 不實企業體 대책문제는 벌써부터 논의되었으며 또한 그 정리방안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는 금후 급속한 성장에 따라서 가중될 대내적인 '인플레이' 압박과 대외적인 國際收支의 역조에 박차를 가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借款企業의 부실기업화 현상이 무엇보다도 '인플레이' 압박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국제수지상의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임을 생각할 때 이 문제야말로 금후 경제개발계획의 成敗를 가름하는 관전이라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실기업문제를 차관기업에 치중하려는 것이니 왜냐 하면 일반기업의 부실화문제란 대상이 너무 광범 잡다할 뿐더러 경제정책전반 및 경기동향과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③</sup>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과제는 정부가 급속한 공업화의 촉진을 위하여 외국자본과 기술의 도입을 적극 권장한 나머지 이것에서 파생된 부작용으로서 이것이 오히려 경제개발계획 그 자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 二律背反性이며 여기에 이러한 문제의 근원을 해명하여 이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금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반복될 뿐만 아니라 경제개발계획에 까지도 적지않은 차질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政策方向

그런데 企業經營의 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그 자체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企業體를 어떻게 재생 내지 재진시키는가에 있다고 하겠으며 우리의 工業經濟가 현재와 같이 취약한 체질과 부실한 경영을 하게 된 것은 工業化過程이 그릇된 경제원리 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데에도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資本主義의 생성과 더불어 공업발전을 지배하여 온 경제원리는 生産上의 比較優位라는 것이며 타국보다도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을 特化하여 그 수출대가로 생산상 불리를 면할 수 없는 산업의 생산물을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고전적 기본원리 위에서 생산적 投資는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주의는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으로의 전개라는 표리일체적인 관련속에서 발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기는 하였으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이같이 比較優位에 기초를 둔 外向的 工業化를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제1차생산재 산업의 결여가 공업화의 방향을 實物的, 技術的인 면에서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게 하기도 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이 공업화정책을 결정할 때 등장한 考慮要因중에는 생산상 우위에서 결과되는 무역이익에의 보다 큰 참여이외에

註 ③ 成昌煥, 不實企業의 問題點과 그 整理의 基本方向, 『經營研究』 高大企研, 1969년 8월호, p. 17.

육망과 國內的 充足手段 사이에 전개되는 不均衡擴大가 가져온 對外支拂手段의 고갈방지라는 기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개발도상국에서는 外換壓迫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肥料, 시멘트 등 거의 國內市場만을 상대로 하는 상품생산을 위하여서만 투자를 하였던 것이니 50년대와 60년대초까지 계속된 우리의 수입대체산업의 건설이 바로 그 전형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수입대체산업의 건설은 外貨節約을 통하여 국제불균형으로 인한 국내균형과피를 방지한다는 長點에 손쉬운 공업건설을 가능케 하는 동시에 雇傭增大에도 비례상으로 큰 공헌을 한다는 強點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년전 UNCTAD에 제출된 「프레비쉬」사무총장의 基調報告에서의 지적을 기다릴 것도 없이 장기간에 걸쳐 內向的 工業化만 추진한다는 것의 국민경제적 불이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단은 內向的 工業化를 부득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업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外向的 工業化로 그 政策方向을 과감히 전환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후 10년간의 輸入代替産業의 육성, 성장을 토대로 하여 세워진 제1차경제개발계획과 또 그 성장위에 세워진 제2차경제개발계획에 있어서도 工業化政策의 기본성격은 내향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있어서 祖國近代化를 위한 모든 것을 거의 수출증대에 걸고 있으면서도 최근 好況一路에 있는 수출경기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 들을 적절히 打開하지 못한 기업을 편의상 부실기업이라고 정의하고 그 정리의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미 말한바 資產狀態가 불건전하고 借款元利金 상황에 代拂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그리고 거액의 銀行延滯로 제기하기 어려운 기업으로 一次的인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경제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異議가 제기되었으니, 첫째로 정리의 主眼點이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이나 國內外的 信用 또는 경영자 내지 企業經歷과 경제성 검토보다는 당해기업의 資本構成比率 등 재무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고, 둘째로는 부실기업의 정리문제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실로 보아 個別企業에 한정되는 국부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기업계 전반에 걸친 일반적 사태라는 점이다.

다음 세째로는 당국의 부실기업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볼때 不實企業과 不振企業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나 한계가 모호하여 자칫 잘못하면 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점이며, 네째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재무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당해 기업체와 금융기관과의 貸借關係이므로 이것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도 타개책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여섯째로는 기업의 생명인 國內外的인 신용이 추락될 경우 비록 기업주가 바꾸어진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그 회복이 어려울 것이므로 이것은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하여간 위와 같은 몇가지의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자본주의의 경제성장과정에서는 주기적인

경기순환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운영에 있어서 好況과 不況과의 현상이 항상 반복되고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기업경영의 일시적인 침체는 기업의 새로운 自己革新을 위한 계기가 되고 있음이 오늘날의 경영 '비전'이기도 하다.

### 3. 整理方案

따라서 소위 不實企業을 정리함에 있어서는 현 시점의 기업의 財務狀況의 良否라는 점에만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經營者, 企業性, 產業展望, 國際公信用 그리고 對外競爭力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일시적인 기업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보다 긍정적이며 기업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不實企業을 정리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시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은 한국경제의 지상과제가 輸出入國으로의 지향이란 기본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그러하거니와 工業에 있어서의 高度成長이 세계에 과시되고 있는 국제적 신망으로 볼 경우에도 더욱 그러한 것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不實企業의 정리에 수반하여 검토되어야 할 문제는 당해 기업의 事後管理를 어떻게 합리화하고 비능율을 제거할 것인가 하는 그 處理方案에 대하여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중견 정부당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不實企業의 정리방침을 보면 대체로 그 사후관리는 은행 및 成業公社의 관리, 일반에의 公賣處分 그리고 당해 기업간의 통합 내지 企業公開의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되는 바는 기업운영에 대한 전문적 경험이 적은 은행이나 成業公社가 사경에 이른 기업체들을 管理하여 과연 정상적 수준이라는 소기의 효과를 성취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이라 하겠다. 여기에 더욱이 새로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게 된다면 한정된 資金供給能力으로 보아서 또 하나의 다른 최악의 사태를 야기시키는 원인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 예가 바로 銀行經營의 不實化라고도 하겠다.

아울러 당해기업의 統合 및 企業公開에 의한 제견도 사실상 한국의 기업사회풍토로 보아서 조속한 시일내에 그 실현이 가능할 것인지는 극히 의문시되는 바이며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것을 公賣할 경우 정부의 새로운 資本支援을 받지 않고 自己資本만으로 인수할 수 있는 能力의 所有者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라는 점들을 고려할 때 문제는 그다지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sup>④</sup>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고찰할 경우 不實企業整理의 순수한 이익은 별로 없지나 않을까 하는 점도 있다.<sup>⑤</sup>

註 ④ 尹泰業, 企業界에서는 이렇게 본다, 『企業經營』 KPC 1969년 8월호, pp. 56~57.

⑤ 林鍾哲, 不實企業—그 責任所在와 對策에 대한 考察, 『經營實務』 서울고대 企業研, 1969년 夏季號, pp. 19~21.

이것은 惡投資에 대한 是正案은 資本損失 이외에 있을 수 없다는 냉엄한 경제윤리의 실증 바로 그것이라고도 하겠다. 따라서 오히려 문제의 각도를 다른 면에서 잡아 한편으로는 政府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앞으로의 工業化를 엄격한 경제적 기준 위에서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企業對策을 세워서 앞으로 있을 代替投資를 계기로 생산의 최적 내지 합리화가 실현되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한국기업 및 한국경제의 체질을 강화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Ⅳ. 韓國企業의 不實化止揚

##### 1. 景氣浮揚

이미 말한 바 작년 8월 3일을 기하여 대통령의 緊急財政命令 이른바 8·3조처가 발동되어서 이달로 만 1년이 경과되었다. 그날의 이 조처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던가는 신고된 기업상대의 私債規模가 3천 5백여억원에 달하였던 것으로도 알 수 있었다.

물론 8·3조처는 私債凍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으나 그것은 당시까지 극심하였던 不況을 호전시키고 불황아래서 不實化에 허덕이던 기업들을 구출하자는 것이며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物價를 연간 3%선으로 억제하는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는 데에서도 또한 의미가 있었다.

여기에 있어서 그 결과가 장애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려우나 하여간 그 조처의 시점을 전환점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와 기업은 겨우 1년간이기는 하나 큰 변화를 일으키었다.

그리하여 不況에서 허덕이던 경기는 이제 過熱을 염려할 만큼의 好況을 누리게 되는 부문이 적지 않거니와 확장을 거듭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나라 경제의 好轉이 모두 8·3조처에 따라서 초래되었다고만은 말할 수 없다. 큰 충격은 큰 변화를 야기시키거니와 경제는 보다 복잡다단하고 더욱 특수구체적인 것이 일반이다. 한가지 '쇼크'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설명되지는 않는 것이며 8·3이후의 변모에도 보다 많은 원인들이 있다.

첫째로는 通貨量이라고 하겠다. 작년 7월말 3천 9백 24억원이던 통화량이 지난 6월말 현재 5천 9백 38억원으로서 1년미만에 2천 14억원, 51%나 팽창되었다. 69년경의 好景氣時節에도 통화량 증가율이 50%를 초과한 적은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계속된 '달러'時勢의 하락과 '엔'貨의 切上내지 上昇으로 인하여 일본의 수출상품이 많은 자리를 내어놓았으며 그 나라의 절박한 公害, 상승하는 地價, 그리고 높아진 勞賃은 필연적으로 한국에 斜陽産業 특히 中小企業과 合作投資를 투입시키는 동시에 觀光人口를 방출시키었다. 여기에 환율이 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달러'貨의 절하로 10%이상의 실질적



인 환율상승 효과가 수출업계에 반영되어서 수출이 증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로는 8·3조치이후 국내시장의 價格機能은 미약하여졌으니 후진국에 특유한 상품의 수요공급의 사소한 변동은 그 가격에 있어서 대폭의 변동을 더욱 면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지난 1년동안에 거의 배수로 뛰어오른 國際原資材의 시세와 아울러 物價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8·3조치이후 1년간의 경기회복의 밑바닥에는 그 충격이 만들어 놓은 후유증도 있다. 私債市場의 붕괴와 더불어 무너진 기업간, 개인간, 그리고 그 양자간의 경제적 신빙성 내지 그 관계도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반면 먼저 풀린 사채, 8·3이후에 형성된 부동산금 등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기업과 연결될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62년 증권파동이래 처음 보는 투기적인 증권 ‘붐’, 투자적인 주식 ‘붐’이 바로 이러한 것이며 ‘아파트’ 투기도 이러한 자금의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하여간 현단계의 好況持續은 대외적 요인으로서 세계경기의 상승과 국제 ‘인플레이’의 누진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의 호조로 이루어지고 있거니와 이와 같은 수출증대로 인한 경기확대는 다분히 他律的인 정책의 소산이라 할 수 있으며 내외경제여건이 변동되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지속되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와 기업이 대외적으로 민감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環境造成

대내적인 요인면에서 好況을 지탱시키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활발한 投資活動과 이를 위한 계속적인 금융확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8·3조치는 기업의 금융비용을 크게 삭감시켜줌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증대에 열중할 수 있게 하였다. 금융을 확대하고 總投資를 급속히 확대시키어도 물가를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외관상 탈없이 계속 호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⑥

그런데 금융확대와 투자급증이 가져오고 있는 好況의 취약점은 기업의 財務構造가 여전히 부실하다는 사실이다. 8·3조치이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은 부인할 수 없고 金融費用이 크게 경감되기는 하였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는 기본적으로 변동이 없으며 거의 투자와 금융의 확대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국내경기의 호황을 반영, 금년도 1·4분기중 우리나라 기업의 자금수급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한편 법인기업의 자기자본 비중이 높아졌으며 유동성의 대기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0일 韓國銀行이 발표한 1·4분기 자금순환분석에 의하면 동기간중의 자금수급은 공급 2천 8백 97억원, 조달 2천 6백 73억원으로 작년의 동기에 비하여 각각 241.2%와 132.8%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법인기업의 자금조달 총액은 작년의 동기보다 89.1%가 늘어난 2천 3백

註 ⑥ 李甲燮, 景氣와 物價, 時論『東亞日報』, 1973, 8, 10(15956호)

2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법인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자기자금 비중이 17.5%에서 29.0%로 높아졌으며 외부자금조달 구성은 금융기관 차입이 90.3%에서 40.5%로 낮아진 반면에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34.6%에서 43.0%로 높아졌다.

앞서 말한바 자금수요규모가 확대된 것은 8·3조처로 인한 수많은 사채권자의 방대한 자금을 묶어놓은 위에 이루어지고도 있는 기업의 회생과 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진 好景氣에 따른 생산시설확충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유통성공급의 확대를 반영하는 것이며 기업의 자기자금비중이 높아진 것은 증권발행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이와 같이 기업의 회생과 발전은 8·3조처의 핵심이 産業合理化에 있었으며 이것이 企業經營의 合理化를 촉진시킨 것은 私債가 2천 6백억원, 銀行債가 2천억원. 그리고 5백억원의 새資金 등 자그마치 5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일률적으로 3년 거치후 5년 분할상환으로 기업에 주어졌기 때문인 것으로도 알 수 있다.

3. 經營合理化

그러므로 기업의 내용은 과연 괄목하게 나아졌으니 기업전체의 負債比率이 71년에 비하여

表 2-1. 72年 100大 法人 缺算順位

(단위 千원)

| 順位 | 法人名   | 缺損額       | 順位 | 法人名     | 缺損額     |
|----|-------|-----------|----|---------|---------|
| 1  | 대성목材  | 5,811,497 | 21 | 삼경物産    | 195,339 |
| 2  | 석탄公社  | 2,916,489 | 22 | 동한産業    | 117,181 |
| 3  | 동아製粉  | 2,115,264 | 23 | 한국肥料    | 95,273  |
| 4  | 쌍룡洋灰  | 1,957,259 | 24 | 한국폴리에스텔 | 89,870  |
| 5  | 신진自動車 | 1,767,820 | 25 | 세방石油    | 87,328  |
| 6  | 동국製鋼  | 1,577,794 | 26 | 새한鐵材    | 72,208  |
| 7  | 한일製粉  | 1,522,664 | 27 | 신한製粉    | 71,171  |
| 8  | 제일毛織  | 1,052,503 | 28 | 일신産業    | 71,116  |
| 9  | 연합物産  | 982,227   | 29 | 태평특수섬유  | 69,396  |
| 10 | 경인에너지 | 921,110   | 30 | 한국鑛業제련  | 59,321  |
| 11 | 대한航空  | 705,926   | 31 | 동양나일론   | 57,316  |
| 12 | 한국洋灰  | 552,261   | 32 | 쌍룡産業    | 41,861  |
| 13 | 흥국商事  | 522,689   | 33 | 대한紡績    | 36,605  |
| 14 | 태평紡織  | 440,914   | 34 | 방림紡績    | 34,836  |
| 15 | 동양시멘트 | 419,905   | 35 | 선경織物    | 32,812  |
| 16 | 대한製粉  | 407,854   | 36 | 동방生命    | 27,449  |
| 17 | 현대自動車 | 325,580   | 37 | 교육保險    | 7,195   |
| 18 | 한국나일론 | 255,834   | 38 | 전남紡織    | 3,321   |
| 19 | 한국合板  | 249,917   | 39 | 제일계당販賣  | 486     |
| 20 | 반도商事  | 243,471   |    |         |         |

表 2-2. 72年 純利益順位로 본 大企業賣出額利益率

(단위 千원)

| 順位 | 法人名  | 純利益       | 賣出額純利益率% | 順位 | 法人名    | 純利益     | 賣出額純利益率% |
|----|------|-----------|----------|----|--------|---------|----------|
| 1  | 韓國電力 | 8,778,876 | 11.8     | 32 | 조흥銀行   | 373,350 | 1.46     |
| 2  | 진해화학 | 3,908,027 | 32.9     | 33 | 상업銀行   | 364,176 | 1.31     |
| 3  | 석유公社 | 3,703,910 | 4.9      | 34 | 제일製糖   | 363,589 | 1.85     |
| 4  | 영남화학 | 3,488,064 | 30.5     | 35 | 금성社    | 337,139 | 2.94     |
| 5  | 海運公社 | 1,947,379 | 17.1     | 36 | 태광産業   | 330,609 | 4.95     |
| 6  | 호남精油 | 1,864,847 | 4.18     | 37 | 한일시멘트  | 326,840 | 5.36     |
| 7  | 동양麥酒 | 1,556,911 | 19.67    | 38 | 금성電線   | 318,734 | 5.00     |
| 8  | 조선麥酒 | 1,098,786 | 17.08    | 39 | 삼도物産   | 313,732 | 4.60     |
| 9  | 대림産業 | 1,014,675 | 6.67     | 40 | 태화고무   | 310,844 | 5.96     |
| 10 | 성창企業 | 994,715   | 10.0     | 41 | 롯데工業   | 300,391 | 3.47     |
| 11 | 삼양食品 | 956,040   | 6.7      | 42 | 자동차保險  | 275,091 | 3.47     |
| 12 | 대우實業 | 951,256   | 5.9      | 43 | 진양化學   | 270,592 | 4.41     |
| 13 | 선경합섬 | 799,300   | 9.55     | 44 | 再保險公社  | 295,547 | 1.05     |
| 14 | 동아製藥 | 758,765   | 11.8     | 45 | 대성産業   | 251,327 | 4.02     |
| 15 | 樂喜化學 | 756,551   | 6.39     | 46 | 기아産業   | 221,867 | 1.84     |
| 16 | 대한通運 | 741,611   | 5.4      | 47 | 동아建設   | 220,847 | 2.62     |
| 17 | 대한電線 | 649,904   | 5.94     | 48 | 삼호紡織   | 208,440 | 3.37     |
| 18 | 진로酒造 | 639,256   | 8.15     | 49 | 삼립食品   | 197,251 | 2.42     |
| 19 | 태창木材 | 622,274   | 10.73    | 50 | 극동建設   | 172,341 | 3.25     |
| 20 | 한진   | 600,200   | 11.07    | 51 | 종합食品   | 170,471 | 3.27     |
| 21 | 고려遠洋 | 565,484   | 6.24     | 52 | 신탁銀行   | 149,321 | 2.76     |
| 22 | 한일합섬 | 534,135   | 4.20     | 53 | 삼양사    | 122,822 | 0.97     |
| 23 | 서울銀行 | 516,653   | 3.07     | 54 | 동일紡織   | 99,527  | 1.48     |
| 24 | 한일銀行 | 495,587   | 1.84     | 55 | 삼환企業   | 91,123  | 1.59     |
| 25 | 제일銀行 | 486,557   | 1.85     | 56 | 연합鐵鋼   | 83,605  | 0.29     |
| 26 | 영풍商事 | 484,900   | 8.35     | 57 | 미원販賣   | 81,205  | 1.08     |
| 27 | 삼부土建 | 430,990   | 6.01     | 58 | 삼양食品販賣 | 55,349  | 0.35     |
| 28 | 미원   | 430,334   | 6.56     | 59 | 원풍産業   | 42,761  | 0.36     |
| 29 | 현대建設 | 422,811   | 2.30     | 60 | 강원産業   | 24,838  | 0.28     |
| 30 | 해태제과 | 416,679   | 4.29     | 61 | 광일화섬   | 21,414  | 0.33     |
| 31 | 국제化學 | 413,689   | 4.91     |    |        |         |          |

※ 東亞日報(1973. 8. 3.) 제15949호 掲載.

작년에 이미 81%나 떨어졌고 流動資金의 비율은 20%나 높아졌다. 株式을 통한 자금조달이 18%나 늘었고 利子負擔은 판매액의 9.9%에서 7.1%로 거의 3%나 낮아졌다. 자기 자본에 대한 利益率은 제작년의 4.4%에서 작년말에는 14.2%로 3배이상이 커진 것이다. 그런데도 먼저 말한 바 輸出支援, 外資企業支援, 企業을 위한 많은 財政投資 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은 더욱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익을 의식하는 기업가 정신은 더욱 진작되어야 한다. 경영합리화라면 종업원 감원과 가격 내지 요금의 인상만을 거의 되풀이하던 기업

이 技能工 내지 熟練工 부족과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공급에 즐거운 비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百大法人企業 가운데 순익을 낸 회사가 61개인 반면 결손을 낸 회사는 39개사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申告損益은 기업이 매 회계년도마다 결산끝에 공고하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 개념과는 달라서 稅法에 규정된 각종 세감면의 원천이 되는 과세표준 즉 法人純益에서 미리 감면세울만큼 뺀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순손익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결손을 낸 것으로 발표된 39개 대기업가운데 일부 內需業種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로는 막대한 순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租稅減免規制法이나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세금을 면제 받거나 감액 받은 업체들이라고 한다.

이러한 업체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合板 수출로서 호경기를 크게 누리고 있는 大成木材이다. 외형순위 14위이며 결손으로 제1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은 막대한 外貨를 획득하였고 강철, 시멘트, 섬유, 방적 및 비료 등의 업체들이 바로 이러한 것에 해당된다.

그리고 石公의나 鑛鍊公社와 같은 결손업체인 국영기업체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京仁 '에너지'나 韓國肥料, 大韓航空처럼 民營化되었거나 대규모 外資企業體의 경우는 일정기간중 세감면 비중이 큼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외형상은 결손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여기에 다시 百大企業 가운데에서 해당기업의 순익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百分率 즉 매출액순이익율이라는 기업경영분석방법에 의하여 그 업체의 경영상태를 순위에 따라 지적하면 다음 別表 (2)와 같다. 이것은 자본수익율이 출자자의 주요지표라면 이 매출액순이익율은 경영자의 경영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쟁기업 또는 다른 기업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自社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문제점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鎭海化學, 鎭南化學과 같은 상위에 속하는 순익회사이며 合作投資業體는 이미 投資元本을 훨씬 상회하는 果實送金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와의 불리한 투자계약으로 말미암아 외형상은 결손업체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사정은 현재 지속되고 있는 好況與件이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기업은 다시금 8·3조처 이전의 상태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된다. 억눌린 物價, 떠도는 資金, 그리고 아직도 자리잡지 못한 한국의 기업가의 社會的 責務 등 이러한 점들에서도 無定見한 好況에의 편승은 신중한 자세가 요청된다.

# Problems of Deficit-Ridden Foreign-Invested Enterprises in Korea

**Song Chong Keuk**

## **Summary**

That virtually some government controlled or invested business corporations and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are being caught in a tight financial straitjackets in spite of the present boom is dismaying indeed—dismaying because the plight that is commonly besetting them all is bound to deal a lethal blow not merely to business circles related, directly and indirectly, thereto, but also, in the ultimate sense, the taxpayers on the whole.

For one thing, word is out that a large sum of budgetary outlays expended by the partial foreign invested ( \$5,000,000 ) Korea SAMHO Spinning Co., for example, will consist of borrowings. We wonder just why things facing the textile corporation have become so deplorable as this.

It is true that demands have kept on soaring for fiber over the years. It is equally true that rises in textile rates imposed on both industrial and ordinary household consumers have proved no less drastic in the last several years. Again, it is true that the corporation is one of the largest suppliers of textiles.

All this makes us—and everyone else in this country, too—suspect that something has definitely gone wrong with the textile firm. Not merely do we suspect, but we are also eager to see that something will be done, definitively and quickly, for the textile company. Also something for those foreign invested business corporations which are caught in similar situations so that they can help themselves back in to shape.

We have learned much to our dismay that what has been playing a detrimental part in forcing a number of foreign invested business corporations, including the textile company, into tight financial straits is the sluggishness with which many government agencies have made payments for the goods or services they have been rendered. If what we have learned is true,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government agencies involved will have to right

right the situation immediately, not in words but in action. By so doing they will be able to set a fine example for other sloppy clients to follow.

Business corporations controlled or heavily invested in by the state or foreign countries have been accorded tremendous governmental assistance. This fact besieges us with a sense of paradox that the government has been liberal in assisting business corporations under its control but that it has been quite slovenly and incapable of paying them for the goods or services they have been supplied with.

These and similar grievances disturbing the sound management and operation of foreign invested business corporations should have been dug out during the recent legislative inspection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We do not think it is too late for the government to come up with an authentic set of "white papers" dealing with problems involving the elevation of managerial and operational efficiency of all government-controlled big-time business concerns, to say nothing of the textile company. We would like to add quickly, in this connection, that the textile firm is a down-to-earth business setup, and so much so that it is quite out of line for the government to keep on handing out financial assistance to the company. The same can be said of other foreign invested enterprises coming into the same sphere.

Finally, we would like to emphasize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expedite development of business corporations under its aegis in such a way as to switen them over to optimum scale business and long term-low interest loans as soon as possible.